

종합·해설

하한정국 되레 뜨겁다

- ① 靑 개각 인적쇄신 예고
- ② 한나라, 조기전대 시골
- ③ 민주, 인사청문회 반격
- ④ 친노 신당창당론 주목

정국회를 앞둔 8월이면 보통 국회는 조용한 가운데 정기국회 준비에 바쁘지만 올 8월 하한정국이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은 우선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와 내각의 인적 개편을 통해 야당의 공격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지도 관심거리. 하지만, '천성관 낙마'로 주가를 올린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도 적극 참여, 여권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예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한나라당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 논란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보이며 여야 모두 보수 및 진보 연합·연대 논란으로 뜨거운 8월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 예고=4월 재·보선 패배 이후 여권에서 계속 거론되던 인적 쇄신이 다음달 초 이명박 대통령의 여름휴가 이후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인적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지며 보수진영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카드로 떠오른 '총청 또는 호남 총리론'의 현실화 여부다. 총청권 인물로는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 이완구 총남지사, 이원종 전 총북도지사 등, 호남권에서는 전운철 전 감사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친박(친박근혜)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과 최경

환 의원 등 주요 친박 인사들이 입각할지도 관심거리다.

◇인사청문회로 민주 '반격' 할까=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이후 민주당은 장외 투쟁과 민생 챙기기의 '쌍끌이 투쟁'에 나섰다. 하한정국에서 투쟁에만 매몰하는 정당이라는 감성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여권의 민생 행보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8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1천185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태수습 노력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향후 사교육비와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서민의 생활과 연관된 7대 민생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소집되는 고위정책회의를 그대로 유지, 민생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역과 신촌

9월 전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내년 1~2월 조기전대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투쟁·민생' 쌍끌이 전략 나서

언론악법 무효 가두 홍보·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어(對與) 투쟁과 민생 챙기기의 '쌍끌이 투쟁'에 나섰다. 하한정국에서 투쟁에만 매몰하는 정당이라는 감성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여권의 민생 행보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28일 민주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정세균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 회복 투쟁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면서 "노동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1천185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태수습 노력을 당부했다.

민주당은 향후 사교육비와 등록금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 서민의 생활과 연관된 7대 민생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매주 목요일 소집되는 고위정책회의를 그대로 유지, 민생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투쟁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영등포역과 신촌



민주당 정세균(뒤쪽 가운데)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원회 발대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 백화점 앞에서 가두 홍보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29일에는 경기도 안산과 수원, 30일에는 성남과 구리에서 가두홍보전을 벌이는 등 수도권투어에 나선 방침이다. 8월에는 호남과 강원, 충청, 부산과 영남 순으로 전국을 순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부세력과의 연대도 강

화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시민사회대표와의 간담회를 열고 미디어법에 대한 공동대책 의지를 다졌다.

특히, 민주당은 미디어법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한나라당의 대리투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질 태세다.

민주당은 일단 대리투표의 직접적

인 증거확보를 위해 국회 본청의 CCTV(폐쇄회로회선) 33대의 영상자료를 확보하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한편 국회 사무처가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반영한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의사록에 재투표 부분을 누락시킨데 대해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관세청 "천성관 정보 유출자 색출중"

관세청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은 천성관 전 후보자 부인의 소꿉 정보 유출과 관련된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여부를 검찰하고 있으나 아직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관세청이 정보 유출 직원을 색출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

관세청 관계자는 "정보 유출 직원을 색출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일단 관련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이들 직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유력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전산 시스템 조회 여부를 추적해 관련 직원을 찾아내 징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감찰 부서에서 관련자들을 감찰하고 전산시스템도 점검해야 해 정보 유출자를 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천성관 전 후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관세청 직원을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으나 관세청에서 자체 조사 중이고 사안의 성격상 해당 기관의 내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효과적이라면서 조사를 일단락했다. /연합뉴스

임두성 의원 사전 영장 검찰, 앞선수재 혐의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28일 아파트 건설 시행업자로 부터 수십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앞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의원은 2007~2008년 경기도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을 맡은 B사 대표로부터 분양 승인 등 시행 업무를 도와 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20여억원을 받은 혐의다.

임 의원은 받은 돈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親盧 창당은 실수 되풀이하는 것"

박지원 의원 비판

민주당 박지원 의원(목포)은 28일 일부 친노세력의 신당 창당 작업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도 생전에 신당을 창당하는 것을 반대한 일이 있다"고 친노 세력 일부의 창당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정서와 참여정부는 한 식구다. 우리 민주당은 과거에 통합을 해서 성공했고 분열을 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어원(厄運)을 받은 혐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참여정부에 참여한 소위 친노그룹으로 분류되는 한명숙 총리는 아직도 우리 민주당에 있고, 또 이해찬 총리나 유시민 장



관은 신당 창당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따라서 일부 극소수 인사가 그러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민주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결국 민주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주선 의원도 이날 불교방송과 인터뷰에서 "민주세력이 결집해 민주당을 만들었는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면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못할 것이고, 노 전 대통령의 유지도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디어 투쟁도 첨단방식으로"

김효석 의원 주장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에 맞서 민주당이 장외 집회 등을 통한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투쟁 방식의 현대화'를 주장,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의원은 28일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한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국민적 반감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외 투쟁 일반도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현대적인 투쟁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여름 더위 아래서 장외 투쟁은 한계가 있으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다양한 투쟁 방



식을 도입, 국민이 함께 싸울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을 상대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

는 등 '참여하는 저항'의 형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투쟁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재미있고 부담 없는 '저항의 광장'은 사실상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처럼 다양하고 보다 현실적인 투쟁 방식은 소수 야당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남성 헤어 기능장 **大山프림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565-8888** '사람세상' 방문

가발 **초슬림!!** **각 품 50** **7월 31일까지 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정당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우전화 (02) 673-5858, 673-6292
원형이후 11-800-9953

메트남 국제결혼

메트남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반려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 메트남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싱글 남녀를 소개합니다.
2. 메트남은 회원들의 결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메트남은 회원들의 결혼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오자이국제결혼 **062) 232-8866** **010-0298-8866**